

## 경제윤리와 국민복지

이상옥\*

〈 目 次 〉

I. 서 론	V. 국민생활복지 내용
II. 경제윤리의 흐름	1. 종류
III. 자본주의 정신과 기업윤리	2. NEW와 국민복지
IV. 국민 경제생활의 변화	3. 사회지표와 국민복지
1. 생활과 소비의 변화	VII. 국민복지의 조건
2. 의식의 변화	VIII. 결 론

### I. 서 론

산업폐수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우리사회의 경제윤리와 복지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에서 그간 우리의 숨겨진 자화상을 보는 것 같다. 때문에 우리의 얼굴을 아무리 다른 곳에서 성형도하고 화장을 한다 해도 행복해 질 수 없다. 고로 우리는 참된 모습을 깨닫고 이런 집단이나 기업도 국민의 복지 생존과 사회공동가치를 겨우고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고 사회의식의 진화, 새로운 가치관 정립, 산업화시대의 왜곡된 가치관에서 탈피하는 계기<sup>1)</sup>가 되어야겠다.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객관적 합리성을 지나치게 강조돼 주관, 가치판단, 윤리성이 무시 내지는 거부되어 왔던 현대경제의 취약점의 진료를 개청해 보고 쓸모 있는 경제윤리와 국민생활복지 증진의 모습과 나아가서는 생존문제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평등의 상식적 생활방식<sup>2)</sup>을 강구해 보고자 하는데 본 본문의 뜻이 있다.

때문에 현재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생태학적인 건전한 인간환경에 창조,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고 살기 위해 인간의 양심에서 불평등<sup>3)</sup>이 허용되지 않는 곳을 향해 계속적이 연

\* 안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 조선일보 사설, 1991. 3. 22.

2) 시드네 세프린·주명진 공저, 「경제윤리」, 박영사, 1987, 제76장 3참조.

구집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II. 경제윤리의 흐름

윤리나 도덕에 관한 문제는 우리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고 자기반성을 하는 가운데서 싹튼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고 보람되며 값어치있는 행동이 나 삶인가를 가름하는 저울의 보편 타당한 기준이나 원리가 윤리인 것이다. 경제윤리문제도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잘 잘못을 가려서 어떻게 생활해야 바르고 보람되며 값어치가 있는가를 판단할 원리나 기준을 추구하고자 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경제 윤리는 그 대상이 될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부조리나 비도덕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그것을 옳게 인식하여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있는 가운데서 양양될 수 있을 것이다.<sup>4)</sup>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경제윤리 문제는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나는데 그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 특히 직장을 무대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중에서 나타나는 직업윤리 또는 유통과정에서 일어나는 소비윤리나 상업윤리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체제의 이론에 있는 사회적 원리에 대한 반성에서 일어난다.

직업윤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윤리, 노동윤리, 노사관계의 윤리이다. 여기에서는 윤리문제가 생산에 능력 것 공헌하고 노동한 것만큼은 받는 면에서 문제가 되므로, 생산 면에서의 능률(근면)과 분배면에서의 공정(자선)이 윤리의 내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분배받는 소득을 지출하는 교환 소비면, 즉 유통 면에서는 상업윤리 소비윤리문제가 제기되고, 교환 면에서는 정직이, 소비면에서는 절약이 윤리의 내용이 된다.

체제윤리문제는 사회가 안정되기보다 동요되고 변화하는 시대에 더욱더 제기된다. 예컨대 제1차 세계대전시의 러시아 혁명, 1930년대의 세계적 대불황, 1970년대 이후의 현대자본주의의 위기 등에 의한 세계정치경제의 혼미는 사람들로 하여금 직업윤리 이상으로 체제윤리나, 바람직한 국제경제 질서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시대에는 자유방임이 체제윤리가 되는 동시에 이것이 개개인의 행위의 규범이 되었

3) Narindar Singh : *Economic and the Crisis of Ecology*, Oxford Univ. press 1976. calcurra, 1976, Ch. 7, Barry Commonor : *Ecology and Social Action* : Univ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973. P.24.

4) 박병호 감역, 「인간행위의 경제학」, 경문사, 1987, pp. 203-204.

다. 그러나 자본주의 모순이 나타남에 따라 직업윤리가 체제윤리가 양립될 수는 없었다. 이리하여 19세기 중엽에 사회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체제윤리가 나타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하여 케인즈(J.M.Keynes)등에 의해 주장되는 자본주의의 수정을 내세우는 체제윤리가 나타나게 되었다.

자본주의 경제의 성립·발전기의 경제윤리를 고전적 경제윤리라고 한다면 성숙·정체기의 경제윤리를 현대적 경제윤리라고 규정할 수도 있다. 산업혁명을 거쳐 생산적 충산충을 담당 자로 하여 산업자본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본주의가 형성되었다. 이 때의 경제윤리는 열심히 일하는 근면, 성실, 청렴이나 금융과 같은 절약, 신용과 같은 정직, 가난한 자를 돋는 자선과 같은 것이고 이것들을 통일시키는 것은 자유를 전체로 한 자율적인 생활태도였다.

그리고 개개인의 사익추구는 결과적으로 사회전체의 공익과 합치됨으로 개별윤리와 집단윤리가 합치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적 경제윤리가 크게 변모된 현대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현대자본주의는 대량 생산을 주축으로 한 유통혁명과 대량소비의 시대, 경제사회에서는 자율의 윤리가 상실되고, 그 대신 조직 환경의 타성에 따라 움직이는 대중이 나타나고 근면과 절약대신에 여가와 낭비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상업주의(Commercialism)에 치우쳐 광고나 매스컴이 지나친 허위적인 선전을 한다던가 그 밖의 각종 경제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서 반경제적 윤리적 행동을 규제한 새로운 윤리기준<sup>5)</sup>은 무엇인가 문제가 될 것이다.

현대에 있어서도 고전적 경제윤리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음미하여 근면과 더불어 여가를 적절히 즐기고 정직 내지는 공정과 더불어 사생활을 존중토록 하며 절약도 중요하지만 생활수준 향상과 소득의 적정사용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고전적 윤리와 현대적인 것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데는 중庸의 도덕적 감각이 요구<sup>6)</sup>될 것이고 이것을 기르는 것이 자율적 개인으로서의 자아를 확립하는 것이다.

### III. 자본주의 정신과 기업윤리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가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에 힘을 합해 가는 사회이다. 따라서 개척자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5) 김윤한, "현대경제인의 윤리적 과제", 「단전 14」, 단국대, 1967, p.116.

6) 임의천, "경제·사회 발전과제의 단계" 「산업연구 IV집」, 19087, p.107.

이윤이 행표가 되겠지만 사회적 입장에서는 기업가를 포함하여 생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그 가족의 물질적·정신적 행복을 보다 크게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목표가 된다<sup>7)</sup>. 고로 기업가적 입장과 사회적 입장 사이에서 모순과 갈등이 일어날 때 이것을 조화시키려는 데서 기업 윤리 내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문제로서 제기된다<sup>8)</sup>.

기업윤리 문제가 제기된 배경은 복지를 외면하고 각종 모순을 수반한 성장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다는 점, 매점 매석, 가격의 편승인상, 과대광고 등과 같이 기업윤리가 땅에 떨어졌다 는 점, 이상과 같은 각종모순을 인식하고 이것을 시정하려는 노동조합,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중소기업단체, 주민단체 및 지식층 등의 세력으로 구성되는 대항력(Countervailing Power)<sup>9)</sup>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윤리 또는 사회적 책임을 문제로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첫째, 미국의 시카고학파의 프리드먼(Milton Friedman)등에 의해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론자들은 기업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 경쟁적 경제활동에 철저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윤을 사회사업이나 장학회에 쓰기보다 가격인하나 확대재생산에 돌려 써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쟁적 활동이 사회적 이익을 결과한다는 고전적 윤리관을 신봉하는 것이다. 그러면 공해<sup>10)</sup>나 신체장애자와 같은 생산능력 상실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공해를 방지 규제하는 풀(rule)의 설정과 최저생활보장을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해결된다고 한다.

둘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가 자본주의 체제의 내재적 모순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다.

셋째, 이상과 같이 상반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불필요론에 대해 사회개량주의는 자유기업체제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그 해악(害惡)면을 기업의 윤리의식 또는 사회적 책임의식의 양양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기업의 사회적 필요론을 내세운다.<sup>11)</sup>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기업이 높이 평가되는 것은 영리활동을 통해 경제의 성장 발전에 공헌함으로서 국민복지를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 차이가 있는 이상 자

7) 백대균, 「국민윤리학 원론」(개정판), 고시계, 1990, pp.47-49.

8) 손석한, 「인간과 윤리」, 성창사, 1985, 4장, "윤리의 기본입장" 1.2 참조.

9) 신유근, 「기업과 사회」, -경영환경론-, 경문사, 1989, p.222, p.288, p.285.

10) 임원택 외, 「한국경제의 이해」, 비봉, 1989, pp.520-526.

11) 박영철, "사회개발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 「한국사회개발연구, X집」,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연구소, 1983년, pp.26-35면 참조.

유경쟁사회는 우열승패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 경쟁에 이긴 기업이 그 세력을 확대하여 기업규모의 급속한 확대를 가져왔고 자유경쟁시장이 아니라 대규모 기업 간의 경쟁을 중심으로 한 과점시장이 형성되었다. 또한 현대기업은 끊임없는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규모의 확대, 경영규모의 대형화가 불가피하여 기업규모를 확대해 왔다. 이렇게 하여 형성된 독점기업 내지 과점기업은 사적 이익추구를 위해 소비자 이익을 회생시키는 각종 폐해를 일으켰다. 이에 대한 정부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기업이 윤리의식에 입각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할 때 기업의 참다운 기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합리적 경영으로 코스트를 절감하여 양질 염가의 제품을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사회에 공헌하는 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대규모의 영리조직인 현대기업의 성공여부가 한 나라 산업이나 국민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큰 사회집단이라는 자각도 필요하다. 고로 기업은 단순한 영리집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사회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능력과 행동력을 갖추어야 한다.

기업이 사회적 공헌이나 봉사에 치우쳐 손실이 발생하는 가운데서는 존립할 수 없고 반대로 사회적 봉사를 저버린 지나친 사리추구도 또한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기업의 본질은 영리와 봉사라는 양면을 띠고 있다. 기업윤리를 주장하는 학설을 보더라도 브렌타노(L. Brentano)나 좀발트(W. Sombart)는 영리욕을 강조했지만 막스 베버(Max Weber)나 드럭커(P. Drucker)는 봉사를 앞세운 영리추구를 주장하였다. 막스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을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식에 입각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할 때 기업의 참다운 기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합리적 경영으로 코스트를 절감하여 양질 염가의 제품을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사회에 공헌하는 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대규모의 영리조직인 현대기업의 성공여부가 한 나라 산업이나 국민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큰 사회집단이라는 자각도 필요하다. 고로 기업은 단순한 영리집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사회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능력과 행동력을 갖추어야 한다.

기업이 사회적 공헌이나 봉사에 치우쳐 손실이 발생하는 가운데서는 존립할 수 없고 반대로 사회적 봉사를 저버린 지나친 사리추구도 또한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기업의 본질은 영리와 봉사라는 양면을 띠고 있다. 기업윤리를 주장하는 학설을 보더라도 브렌타노(L. Brentano)나 좀발트(W. Sombart)는 영리욕을 강조했지만 막스베버(Max Weber)나 드럭커(P. F. Drucker)는 봉사를 앞세운 영리추구를 주장하였다. 막스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에서 찾았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영리욕에는 두 유형이 있는데 그 하나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투기적 사업이나 고리대금업과 같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에 전념하고 거래에 있어서는 성실과 신용을 중하게 여기는

윤리적인 경제용이다. 그는 이러한 윤리적인 영리용을 칼빈의 천직설에서 찾았다. 맡은 바 자기일을 천직으로 알고 성심껏 일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봉사인 동시에 스스로가 구원받는 길이라는 천직설이 건전하게 발달된 근대 자본주의를 일으킨 정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을 현대자본주의에서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드럭커이다. 드럭커는 현대 미국자본주의를 살펴보고 자본주의는 그것이 경제적으로 실패하거나 정치적으로 과오를 범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지주를 상실했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기업이 극대이윤 추구의 목표를 버리고 경제의 창조적 혁신을 기업경영의 지동이념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즉 현대사회의 중추적 지위를 차지하는 대기업은 그의 목적으로서 극대이윤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보다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하여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사회적 책임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윤을 기업에 있어서 제2차적인 목표로 보아 사적 이익을 혁신이란 공적이익에 결부시켰으며 극대이윤이 아니라 필요 최소한의 이윤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 기업윤리 내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불확실한 현대사회에서는 극대이윤을 누리기 어려움으로 기업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최저한의 이윤획득을 목표로 하고 혁신의 담당 등 산업발전 및 국민경제 번영의 담당자 그리고 국부의 원천임을 깊이 인식하여 그 사회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경영책임이 있다. 둘째, 기업은 적정이윤을 유지하면서 분배의 공정을 기하여 종업원 내지 기업관계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다. 즉 기업은 노동자에게는 적정임금을, 출자자에게는 적정배당을 지불해야한다. 셋째, 기업은 교환의 공정, 사회적 공정을 기하여 소비자나 주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기업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과 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적정가격으로 안정적 공급을 해야하며 불량상품을 비싼 독점가격으로 파는 등 부정적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업은 그의 활동에 수반되는 유해한 공해를 사전에 방지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발생 후에 적절한 사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부조리에 의한 부실 기업화나 공익에 위배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현대기업은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해야 하고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국제사회에 대한 각종책임도 소홀히 할 수 없다<sup>12)</sup>.

---

12)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산업사회의 질적수준향상에 관한 연구”, 1981, 전자 연구센터, 현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1980, 참조

## IV. 국민경제생활의 변화

### 1. 생활과 소비의 변화

국민이 소비생활에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① 소득수준의 향상, ② 의식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의 선호와 취향의 변화, ③ 물가변동에 의한 소비재의 상대가격의 변화, 그리고 ④ 소비환경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소비환경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에는 대가족제 도의 붕괴와 핵가족제도의 보급,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농촌생활로부터 도시생활로의 전환, 여가의 증대, 매스컴의 발달, 국제관계의 증대 등이다. 소비생활은 실제로 어느 하나보다는 이러한 요인들의 복합작용에 의하여 변화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sup>13)</sup>.

한국 국민의 소비생활은 6·25동란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복구·재건·성장 과정과 더불어 크게 변화하였는데, 그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몇 개의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6·25동란 직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로서, '생계를 위한 소비기'로서, 소비는 주로 생존을 위한 것으로 그 대부분이 의·식·주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생필품의 소비로 이루어져 있었다. 특히 동란 직후에는 끼니조차 잊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고, 이른바 '보릿고개'라 일컬어지는 춘궁기에는 상당수의 농민들이 반기아상태에 있어야 했으며 홍년이 들헤에는 굶어 죽는 사람조차 있었다. 이 때는 주요 소비재는 쌀, 광목, 연탄 등 의·식·주와 관련된 생필품들이었다. 196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국민 1인당 1일 평균소비액은 700원이 채 못되었고 1983년에 비하면 약 34%정도에 불과한 수준이었다<sup>14)</sup>.

제2기는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로서 '소형내구재 소비기'로서 식량생산의 증대로 식생활문제, 그리고 섬유산업의 발달로 의생활문화는 거의 해결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공업의 발달에 따라 라디오, 재봉틀, 자전거 등 소형내구재의 생산과 소비도 활발해진 시기였다.

제3기는 70년대 후반부터로서, 이른바 '소비혁명'이 시작된 시기로서 한국의 중화학공업이 급속히 발달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가 한국의 가정에 급속히 보급되기 시작했다. 또한 총인구에 대한 도시인구 비율이 60%를 넘고 도시생활양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민의 소비생활에는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13) 김수근 외, [한국경제론], 경세원, 1986 제1장 한국경제발전과정 참조.

14) 송병락, [한국경제학], 박영사, 1985, pp. 751-753.

먼저 식생활 면에서의 변화를 보면, 가장 큰 변화로서는 주식품 중심에서 부식품과 기호식품의 소비와 의식이 급증했다는 점 그리고 의생활 면에서는 뚜렷한 변화는 보다 값싸고 모양 좋은 합성제품의 소비가 크게 늘어났고 가성복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확대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주생활면의 주요 변화로서는, 대가족제도의 붕괴와 핵가족제도의 보급 그리고 핵가족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생활의 비중이 높아진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국민의 취미가 다양화됨에 따라 등산, 낚시, 테니스, 골프, 음악, 그림, 스포츠, 여행 등 각종 레크레이션, 취미 및 문화생활도 급증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여가(leisure)용품을 비롯한 교양·오락관계 제품의 수요도 크게 늘어났다<sup>15)</sup>.

제4기는 80년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승용차 칼라 텔레비전, 룸 쿨러 등을 비롯한 대형 내구재의 소비시대라고 할 수 있다. <표 5-1>에서와 같이 텔레비전의 보급률은 1982년에 이미 85% 수준에 도달했으며 자동차의 보급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시기는 포스토우(W. W. Rostow)의 성장단계론에서의 '대량소비단계'에 해당된다. 경제성장단계론의 세계 제1인자 포스토우 교수는 1983년 제2차 한국방문기념논문 "한국과 제4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은 자동차 및 가전제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3의 산업혁명을 80년대 중반에 마치고 후반부터는 제4차 산업혁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sup>16)</sup>.

더해서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구조의 변화, 즉 소비의 고급화와 다양화, 개성과 생활방식 중시적 소비, 저축과 관련된 가계지출의 변화<sup>17)</sup>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 2. 의식의 변화

소득증대 이외에 국민의 소비생화에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생활의식의 변화로서 과거 약 20년간에 걸친 고도성장과정에서 한국 구민의 소비생화에는 현저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소득증대화 더불어 국민생활의식의 변화가 있었다.

생활의식 변화는 첫째, 소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서 소득수준이 낮을 때는 소비의 대부분이 생존과 직결된 요구의 충족을 위한 것이나, 높을 때에는 소비의 상당부분은 이른바 '즐기기 위한 수비'가 된다.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는 생존을 위한 수단에서 점차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으로 되기도 한다. 즉 '소비를 위한 소비' 혹은 '즐기기 위한 소비'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소득증대에 따라 심화되며, 또한 교통, 통신

15) 송병락, [마음의 경제학], 박영사, 1990, IV장 한국인의 특성과 자기혁신.

16) 정운찬 외, [도전받는 한국경제], 한국신용평가, 1990, pp. 17-62.

17) 경제기획원, "도시가계년보", 각년도 참조.

매스컴 등의 발달에 의한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를 통하여 사회 각층 및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해외에서 국내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그리고 청년층에서 유소년층이나 노년층으로 전파된다.

의식구조의 변화는 또한 노동과 여가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소득수준이 낮을 때는 여가가 더 많은 노동을 위한, 또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즉 여가는 노동에 종속되는 것이고, '노동은 선, 여가는 악'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은 차츰 여가와 노동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여, 오히려 여가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심지어 노동을 위한 여가가 아니라 더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한 노동으로 바꾸어 생각하게 된다. 즉 노동과 여가의 주종관계를 바꾸어 생각하기도 한다.

둘째, 개인주의와 합리주의에 근거한 도시적 생활의식의 침투라 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부모, 처자, 형제, 조상, 스승, 친구 등 남을 중요시한다. '남'을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고향'을 위하고, 더 나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다는 집단의식이 대단히 강하므로 개인의 욕구는 가정 혹은 사회적 필요의 뒷전에 놓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고도성장에 따른 공업화와 도시화,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의 붕괴 및 핵가족화, 그리고 민주주의, 개인주의에 입각한 신교육의 보급과 서구문화의 도입 등은 이 같은 고유의 가치관계를 '나'를 더 중요시하는 의식구조로 변화시킨다. 이 같은 가치관계의 변화는 특히 젊은 세대에 심하며 점차 전 계층 또는 전국에 파급된다. 최근 들어 유홍비 마련을 위한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도 '나'를 위하여는 남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의식 구조 변화를 드러내는 예다.

개인주의와 더불어 합리주의 또한 사회 각 계층에 침투하여 전통적 사고방식에 큰 변화를 초래한다. 합리주의 보급은 생활을 경제적으로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가능한 한 간소화한다.

인스턴트 식품의 보급, 각종 플라스틱 제품의 생활화, 기성복의 보급, 핵가족 중심의 아파트 생활의 확대 등은 합리주의에 따른 생활합리화의 일면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합리주의가 생활을 합리화나 사회발전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구미선진국에 비하여 아직도 이른바 '진정한 의미의 개인' 확립이 안된 한국 사회에서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의 지나친 보급은 때에 따라서는 사회적 모순으로, 통제하지 않는다 하여 훼손하거나 환경을 오염시켜서 '나'만의 이익을 취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영리행위, 그리고 '나'와 '나의 자식'만을 귀하게 여긴 나머지 노인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소득증대와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이나 정신적 가치를 경시하고 돈과 부만을 중시하는 물질주의나 배금사상도 함께 팽배하기 쉽다.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될수록 소외

감, 고독감 또는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이 증가한다. 경제발전은 그 궁극적 목적이 인간의 복지증진에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정신적 풍요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기에 한국은 경제성장 초기에는 수출 지향적 공업화 정책에 따라 물량적 확장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공업화수준이 크게 높아진 1970년 후반부터는 정신 및 문화면에서 국민복지의 향상을 중시하게 되었다.

공업화가 지속되면서 환경오염이나 자연훼손의 피해가 심해짐에 따라 물질주의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게된다. 이런 문제의 해결은 많은 사람의 공동노력을 필요로 하므로 그 해결과정에서는 사회구성원들 상호간의 연대감이 중시된다. 사호가 발전하고 복잡해질수록 국민들 사이에는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sup>18)</sup>.

## V. 국민생활복지내용

### 1. 종류

#### (1) 국민총생산(GNP)<sup>19)</sup>

GNP는 국민전체가 일정기간에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총량을 화폐가치로 표시한 것이다. 국민복지를 나타내는데 가장 오랫동안 쓰여져 왔고 현재도 가장 일반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지표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GNP가 클 수록 복지도 크게 되므로, 성장일변도의 정책이 국민복지 향상의 최선책의 방책이 된다. 이러한 GNP 중심정책은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후진국의 경제 개발 초기에 채택되는데, 한국의 경우에도 60년대초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GNP증대에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두었다. 그 결과 GNP 성장률이 상당기간 동안 연평균 10%정도가 되는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성장론자들의 주장과 같이 복지를 감소시키는 면도 있다. 즉 성장은 도서부문에서 연구집중과 혼란을 초래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유발하며, 자연환경을 오염·파괴시키고, 인간관계를 비인격화·기계화 그리고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가를 포함한 각종 물가를 상승을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함께 가져오는데, 이는 모두 복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이와 같이 GNP성장에는 마이너스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국민복지가 반드시 GNP 성장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18) 오성호, 「자원·환경 경제학」, 법문사, 1989, 제10장 환경오염 규제제도 참조.

19) 조순 외, 「경제학원론」(제4권 정판), 법문사, 1990, 제17장 참조.

따라서 경제성장의 마이너스 면은 도외시하고 플러스 면만을 나타내는 GNP를 유일한 국민복지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보다 정확한 국민복지 상태를 파악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스럽다고 하기 어렵다. 진정한 의미의 국민복지지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마이너스면도 아울러 감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sup>20)</sup>.

### (2) 국민순경제복지(NEW)<sup>21)</sup>

이와 같은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지표가 체계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서 토빈(J. Tobin)과 노드하우스(W. Nordhaus)는 1972년 공동으로 '경제복지척도'(MEW : Measure of Economic Welfare)라는 개념을 발표하여 GNP를 대신하는 복지지표로 사용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NEW의 개념이 발표된 후 사무엘슨(P. A. Samuelson)은 이를 수정·보완하여 국민순경제복지(NEW : Net Economic Welfare)의 개념을 더욱 타당한 복지지표라고 주장하였고, 다른 많은 경제학자들도 유사한 개념을 제시하여 NEW를 이론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GNP와 더불어 '국민복지지표'(MNW: Measure of National Welfare)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국민복지상태를 측정한 바 있다. 현재 MEW, MNW 또는 NNW(Net National Welfare: 순국민복지)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그 이름이 나타내듯이 경제적 복지의 측정을 위한 것으로 GNP를 보완하기 위한 지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사무엘슨 NEW의 개념을 살펴보자.

NEW는 GNP에 비하여 몇 가지 장점이 있으나, 결국은 GNP나 마찬가지로 국민복지이 경제적 측면에만 치중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행복한 가정이나 원만한 가족관계, 범죄로부터의 안정성, 사회적·물리적 환경 등 비화폐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는데, NEW는 <표 5-1>에 나타난 바와 같은 많은 요인들 중에서 여가나 환경오염 등 일부만 고려할 뿐이다.

### (3) 사회복지(SI)

NEW의 결함을 보완하여 국민복지수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민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면 화폐적인 것이건, 비화폐적인 것이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사회지표(SI: Social Indicator)'를 들 수 있는데 <표 5-1>에 나타난

20) 이영선 옮김, 「평등과 효율」, 현상과 인식, 1990, p.173.

21) 조순, 「경제학원론」, 전개서, 제17장 참조.

바와 같이 GNP에서는 도외시되는 주거사정, 환경조건, 보건상태, 공안문제, 고용상태 등 국민생활의 양적 및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을 꽂고루 포함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반면 이와 같은 복지 결정의 각종 요인들을 통합하여 GNP나 NEW처럼 하나의 총량으로 표시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그리고 국민의 복지는 심지어 아름다운 주변환경이나 자연에 존재하는 야생 동식물과 같이 수량화 할 수 없는 많은 요인들의 영향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요인들을 어떻게 지표화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회지표의 방법마저도 충분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국민복지의 여러 면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사회지표를 체계적으로 작성·이용하고 있다.

한국에 NEW는 지금까지 추계된 바 없으나, 사회지표는 1975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는 국제연합 인구활동기구(UNFPA)의 자문과 지원을 받아 1975년부터 한국의 사회지표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1979년에 완성하였으며, 그 결과는 「한국의 사회지표」라는 책자를 통하여 매년 발표되고 있다. 한국인의 생활의 여러 측면과 수준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의 수는 1979년 128개에서 1982년 177개로 증가하였다.

〈표 5-1〉 한국의 국민생활 관계 주요사회지표, 1965~1982.

주요지표	연도	1965	1970	1975	1980	1982
1. 소득						
경상 GNP(백만달러)	3,006	7,834	20,233	56,460	65,740	
1인당 GNP(달러)	105	248	591	1,605	1,800	
2. 식						
1인1일 칼로리 섭취량(cal) <sup>1)</sup>	2,189	2,370	2,390	2,485	2,588	
1인 1일 단백질 섭취량(g)	57.1	65.1	65.1	73.6	78.3	
3. 주						
1인당 주거면적(평)		1.9	1.9	2.9	3.0	
주택보급율(%)	77.4	74.4	70.0	68.6	68.5	
주택수(천호)	3,912	4,360	4,734	5,463	5,763	
가구수(천호)	5,057	5,857	6,754	7,968	8,418	
4. 의						
1인당 섬유소비량(kg)	2.6	4.5	6.6	8.7		
5. 교육						
국민평균 교육년수(년)	5.0 <sup>2)</sup>	5.7	6.6	7.6		
인구대 총학생 비율(%)	22.1	25.4	26.5	27.7	28.1	
국졸자 중학진학율(%)	54.1 <sup>2)</sup>	66.1	77.2	95.8	98.0	
학생의 총수(천명)	6,694 <sup>2)</sup>	7,986	9,204	10,568	11,038	
고등교육취학율(%) <sup>3)</sup>	7.2 <sup>2)</sup>	7.1	7.6	14.8	23.4	

연도 주 요지표	1965	1970	1975	1980	1982
6. 건강					
평균수명(세)	55.2	57.6	60.6	60.6	67
의사 1인당 인구수(인)	2,609	1,773	1,801	1,485	1,387
기생충감량율(%)		55.6	38.6	11.9	7.3
의료보험대상자수(천명)				2,143	3,728
7. 여가					
주당평균비노동시간(시간)		116.4	118.0	116.7	115.8
국민의 관광참여도(%)	17.2 <sup>2)</sup>	29.9	40.6	52.0	61.0
1인당 연평균시행거리(km/인)	529	962	1,493	2,298	2,354
8. 공안					
범죄발생건수(천건)		301	387	595	658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건)	1,371 <sup>2)</sup>	953	1,116	1,387	
자동차 사고건수(천건)	14.9 <sup>2)</sup>	37.2	58.3	120.2	141.2
산재보험적용근로자 비율(%)	8.5	26.3	45.1	66.1	56.4
재해사망자수(교통사고, 화재 등)	2,276 <sup>2)</sup>	3,548	4,087	5,460	
9. 사회적 환경					
경제생활참가율(%)	55.6	55.9	56.5	57.1	56.8
(여성참가율)	(36.5)	(39.5)	(39.6)	(41.6)	(42.2)
노동조합가입율(%) <sup>4)</sup>	22.2	19.8	22.8	20.0	19.0
생활무능력자수(천명) <sup>5)</sup>	355	346	377	316	334
전화가입자수(천명)	221	481	1,075	2,761	4,080
인구백명당 전화보급대수(대)	0.8	1.5	3.0	7.2	10.4
승용차(천대)	39.1	126.5	193.9	527.8	647.0
텔레비전 보유가구 비율(%)		6.5	30.5	78.6	84.6
실업율(%) <sup>6)</sup>	14.7	9.2	6.6	7.5	6.0
공무원수(천명)	333	417	479	596	648
10. 물리적 환경					
의료기관수		10,301	11,118	11,789	12,807
상수도 보급율(%)	21.4	30.9	42.4	54.6	59.0
공적년금 대상자수	414.4	545.2	647.2	874.7	897.0
총인구에 대한 비율(%)	1.4	1.7	1.8	2.3	2.3
1인 1일 급수량(ℓ)	106	158	216	256	270
총도로포장율(%)	5.7	9.6	22.3	33.2	35.7
국도포장율(%)	17.7	23.7	44.0	67.4	60.4

주 : 국민복지를 나타내는 지표는 플로우(flow)와 스톡(Stock)의 이종(二種)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자료관계로 여기서는 이를 통합했음.

- 1) WTO기준 1인 1일 섭취량은 2,348칼로리임.
- 2) 1966년 수치임.
- 3) 고등교육취학율은 20~24세, 인구에 대한 학생의 비율임.
- 4) 노동조합가입 근로자의 총대산근로자에 대한비율임.
- 5) 생활보호법에 의한 불구자, 정신박약자, 노령자 등임

자료 :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79, 1983 및 「주요경제지표」, 1983.

교통부, 「1984년 주요업무계획」, 1984. 2.

한국개발연구원,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수정과제연구」, 1983.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진흥기종합계획」, 1979.

## 2. 국민순경제복지(NEW)와 국민복지

### (1) NEW와 복지증진의 방향

NEW접근법에 따르면 6개의 플러스 요인 즉 NEW개인소비, 개인내구소비재 서비스, NEW정부소비, 정부자본재 서비스, 여가시간, 시장의 활동이 크게 될수록, 그리고 2개의 마이너스 요인, 즉 환경오염, 도시화에 따른 손실이 작게 될수록 국민복지수준은 향상된다<sup>22)</sup>. 복지결정 8개 항목중 가장 중요한 것은 NEW 개인소비이고 그 다음은 중요성의 순으로 여가시간, 시장의 활동, 환경오염, NEW 정부소비, 도시화에 따른 손실 등이다. 이와 같이 GNP에 전혀 감안되지 않는 여가시간, 도시의 활동, 환경오염 등이 NEW에서는 중요한 복지결정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NEW 접근법에 따른 국민복지 증진방향은,

첫째, 개인소비지출중 관혼상제비, 통근비, 치료비 등 개인의 효용을 직접 증가시키지 않는 부분은 줄어드는 반면 의·식·주 등 개인의 효용을 직접 증가시키는 부분이 커질수록 국민복지는 증가한다.

둘째, 동일수준의 소득을 얻는데 소요되는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여가시간이 증가할수록 국민복지는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여가는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그 양과 중요성이 증가하게 된다.

셋째, 주부의 가사노동의 양이 증가하고 그 질이 향상될수록 국민복지는 증가한다. GNP 접근법에서는 주부가 가령 세탁을 세탁소에서, 음식을 음식점에서 그리고 청소를 가정부를 통하여 해결하게 되면 가사 서비스의 시장거래가 발생하여 GNP와는 무관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NEW에서는 주부의 모든 가사 활동을 귀속임금으로 환산한 만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핵가족화 함으로써 도시가구수의 증가가 농촌가구수의 감소보다 빠를 때, 즉 주부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주부의 자질과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NEW로 표시되는 국민복지는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NEW는 가정의 안정,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주부의 가사활동을 중시한다는데 큰 장점이 있다.

넷째, 환경오염이 적을수록 국민복지는 증가한다.

다섯째, 내구소비재의 대중보급률과 주택보급률의 증가가 국민복지증진을 가져온다.

22) 金森久雄, 「入門日本經濟」(제5판), 1981, NEW 測定區分項目

여섯째, 교육, 문화, 공중보건과 위생과 관련된 정부지출이 증가할수록 국민복지는 증가한다. 일곱째, 도시화에 따른 혼란, 교통사고, 각종 범죄 그리고 통근시간 및 거리가 줄어들수록 국민복지는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도로, 공원, 상·하수도설비 등 사회자본에 대한 정부투자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공공서비스의 양이 증가할수록 국민복지는 증가한다.

이사에서와 같이 NEW접근법에서는 국민복지증진의 방향을 8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의 국민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투자총액이 아니라 그로부터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서비스라고 하여, 장래보다 현재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NEW접근법은 현재를 중시한 나머지, 장래의 복지 결정요인인 투자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기 쉽다<sup>23)</sup>.

## (2) 국민순경제복지(NEW)와 현재 및 장래의 복지

한정된 자원을 현재와 장래의 복지를 위하여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것이다. 한정된 자원을 현재에 많이 소비하면, 소비 당시의 복지는 크게 증가하나 장래의 소비를 위한 투자 자원이 그만큼 감소하므로 미래의 복지는 줄어들게 마련이다. 그 반대로 한다면 현재의 복지는 적더라도 장래의 복지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한정된 자원을 현재와 장래의 복지에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개미와 베짱이'의 우화에 비유해 보면 개미는 미래를 위하여 축적하고 노력하는데 비하여, 베짱이는 현재를 즐기고 현재의 소비를 위하여 산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베짱이형이나 개미형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자의 절충형이다. 즉 양자를 어떻게 조화있게 절충하느냐 하는 것이다. 논의에 있어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이 필요하다. 하나는 현재와 미래의 소비의 상대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주관적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소비를 얼마만큼 줄이면 장래의 복지가 얼마나 늘어나느냐라는 '기술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복지에 치중하는 NEW는 이 같은 문제에 만족할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다. 중요한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복지수준이 계속 높게 될 수 있도록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토빈(J. Tobin)은 투자의 중요성을 감안하는 새로운 복지지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특히 노동생산성의 상승을 지속시킬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수준의 투자규모를 추계하여 이를 NEW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포함시킨 NEW를 지속 가능한 국민복지(sustainable NEW)라 하여 NEW와 구분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sup>24)</sup>.

23) 김수근 외, 「한국경제론」, 전개서, 제3장 한국경제의 발전방향 참조.

더해서 이웃나라에서는 감성의 시대에 쾌적함을 추구하고 사람에게 정다운 살림살이 물건을 개발키 위해 인간감각 계측기술을 연구하는 인간생활공학센터가 생겨서 과학기술이 인간으로부터 괴리되었다는 오늘을 다시 한번 인간으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up>25)</sup>.

### 3. 사회지표와 국민복지

#### (1) 한국의 사회지표<sup>26)</sup>

한국에서는 1975년부터 경제기획원이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작업으로 SI를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사회목표분야를 다음과 같이 8개 분야로 나누고 있다. 즉 ① 인구 ② 소득·소비 ③ 고용·인력 ④ 교육 ⑤ 보건 ⑥ 주택·환경 ⑦ 사회 그리고 ⑧ 공안 등이다. 이들 8개 분야의 사회목표 달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1979년에 128개 지표, 그리고 1982년에는 177개 지표를 작성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간추려 보면 <표 5-1>에 나타난 바와 같다.

SI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GNP나 NEW에 비하여 국민복지 결정요인을 더욱 포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GNP는 소득만을 유일한 복지지표로 간주하며, NEW는 여가시간, 환경오염 그리고 도시화에 따른 순실 등 소득이외의 복지요인도 고려한다. 그러나 SI는 이들 요인에 추가하여 건강, 교육, 안전 그리고 생활환경 등 더 많은 복지 결정요인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감안하고 있다.

이들 각 복지분야 또는 복지결정요인은 '생의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됨은 물론이다. 즉 개인이 학교 교육기, 교육후, 독신기, 가족형성전기, 가족형성후기, 가족성숙기 및 노령기 등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 선진국 복지영역의 우선순위는 ① 건강 ② 수입과 소비생활 ③ 교육과 문화 ④ 근로생활 ⑤ 생활환경 ⑥ 공정한 생활보장 ⑦ 안전과 개인의 보고 ⑧ 가족관계 ⑨ 여가생활 ⑩ 커뮤니티생활 등의 순이다.

<표 5-1>에 나타난 한국의 주요사회지표를 보면 1965년 이후 국민생활은 여러 면에서 크게 향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택과 공안관계는 예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세계주요국의 주요사회지표를 비교해 보면, <표 5-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적으로 복지수준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SI로 표시되는 한국의 복지

24) 임현수 옮김, 「인간의 경제 I, II」, 제7장, 제11장 참조.

25) 「일본의 새소식」, 제212호, 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 광보문화원, 1991. 4. 1.

26) 경제구조조정 자문회의 보고, 「경제선진화를 위한 기본구상」, 1988. 10. pp.39-42, pp.157-163.

〈표 5-2〉 주요사회지표의 국제비교

지 표	국 별	한국	자유 중국	일본	미국	서독	프랑스	영국
1. 소득								
1인당 GNP(달러, 1981) <sup>1)</sup>	1,700	2,360	10,080	12,820	13,456	12,190	9,110	
GNP중 농업의 비율(%, 81년)	16	9	4	3	2	4	2	
2. 건강								
의사 1인당 인구수(명, 80년)	1,690	1,590	780	520	450	580	650	
1인당 1일 칼로리섭취량(cal, 80년)	2,485	2,780	2,912	3,658	3,658	3,391	3,306	
사망률(천명당, 81년)	7	6	6	9	12	1	12	
출생률(천명당, 81년)	24	21	13	16	10	15	13	
평균수명(세, 81년)	66	72	77	75	73	76	74	
연평균인구증가율(%), 70~81년)	1.7	1.9	1.1	1.0	0.0	0.5	0.1	
3. 교육								
고등교육취학율(%), 79년) <sup>2)</sup>	14	19	30	55	26	25	20	
독서가능성인비율(%), 80년)	93	82	99	99	99	99	99	
중고등학생취학율(%), 80년)	85	82	91	97	?	85	82	
4. 여가								
주당평균비노동시간(제조업, 81)	114.4 <sup>3)</sup>			127.0	128.2	126.9	127.7	126.0
1인당 부시공원면적(m <sup>2</sup> , 81년)	2.0	119.0	1.6 (동경)	45.7 (워싱턴)	26.9 (본)	8.4 (파리)	30.4 (런던)	
5. 공안								
범죄발생율(10만명당, 68년)	1,387 <sup>3)</sup>		1,075		1,730	1,535	2,526	
사고사망율(10만명당, 81년)	14.7		41.9	57.5	61.7	76.4	35.4	
GNP중 국방비비율(%), 80년)	6.6		0.8	4.9	2.7	2.8	4.6	
6. 생활환경								
주거밀도(1실당인구, 81년)	2.0(75) <sup>5)</sup>		0.8(78)	0.6(70)	1.5(72)	0.9(75)	0.6(71)	
자가주택보유가구비율(%), 81년)	63.6(75)		60.4(78)	64.8(77)	33.5(72)	47.1(75)	50.1(71)	
도로포장율(%), 81년)	29.5	62.2(77)	37.1(77)	48.3(75)	86.0(76)	55.4(75)	96.3(75)	
상수도보급율(%)			26.0(77)	71.0(68)	79.9(72)	65.0(75)	94.0(76)	
주택전화(백명당대수, 77년)	2.9	7.1	42.6	71.8	34.2	29.3	39.4	
승용차(천명당대수, 76년)	3.4	12.5	163.8	506.7	307.6	330.5	254.5	

주: 1) 1인당 GNP는 세계은행추계치임.

2) 고등교육 취학율은 20~24세 인구에 대한 학생의 비율임.

3) 1978년 경제기획원 자료임.

4) 한국의 공원면적의 50개시 평균치임. 제2차 국토개발자료임.

5) ( )안의 수치는 연도임.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3.

일본총리부 통계국, 「국제통계요람」, 1983.

내무부, 「한국부시년감」, 1983.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1983 및 「한국의 사회지표」, 1983.

수준은 일본, 미국, 그리고 서독 등의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크게 벌어지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SI는 의·식·주 등 '사적 분야'와 교통시설, 도시공원, 그리고 의료시설 등 '공적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업성장에 치중한 전후 부흥기의 일본이나 70년대 고도 성장기의 한국의 경우에는 '공적 분야의 SI'로 나타나는 복지수준이 '사적 분야의 SI'로 나타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사회개발투자를 중시하는 복지지향 국가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sup>27)</sup>.

SI의 단점은, ① SI는 국민복지의 여러 측면을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각종 지표들로 나타낼 수 있을 뿐 GNP나 NEW와 같이 단일지표로 국민전체의 복지상태를 나타낼 수 없다. 그리고 ② SI는 많은 지표들 간의 상호관계를 적절히 감안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1인당 공원면적이 선진국에 비하여 크다고 하더라도, 공원이 이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는 적고 오히려 사람이 적은 강원도 같은 지역에 많다면 이사회지표는 실제로 큰 의미가 없다.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의료시설이 많다 하더라도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다면 농촌이나 중소도시의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어려우므로 국민전체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주택, 도로, 의료시설, 그리고 공원시설 등은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근접입지에 있어야 각각 효율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I<sup>28)</sup>는 이런 점을 적절히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

## (2) 국민복지와 생활환경

경제학자 폴 사무엘슨은 "동경은 영망이다. 일본인만이 거기서 살 수 있다."라고 했다. 혼잡과 환경오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로솝스키(Henry Rosovsky)와 패트릭(Hugh Patrick)은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하였다. 하나는 일본인들은 특히 2차세계대전 직후에는 참혹할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경험했고 또한 전통적으로도 검소한 생활태도에 젖어왔으므로 혼잡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환경개선과 같은 투자를 사치로 여겼으므로 생활환경 개선에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환경오염이나 환경파괴는 이른바 전환점이 있는데 전환점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별 문제가 아니라 일단 넘어서면 겉잡을 수 없게 악화의 전환점에 이르게 된다.

경제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① 성장② 안정 ③ 능률 ④ 협평 ⑤ 생활의 질적 향상의 다섯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인데, 일본의 최근까지 이들 ①~④ 만을 중시하고 ⑤는 서

27) 김낙중 외, 「한국경제의 현단계」, 사계절, 1985, pp.367-377.

28) "한국의 사회지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III장 부문별 사회지표 5, 6, 5참조, p.269.

의 도외시하였던 것이다. 즉 생화의 양적 문제와 관련이 있는 ①~④를 중시하고 질적 문제와 관련이 있는 ⑤는 도외시했던 것이다. 한국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⑤를 오랫동안 도외시한 결과 1970년대 후반부터 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장기경제사회발전전략(1977~91)」에서는 '쾌적한 환경의 창조'를 '안정된 국민생활의 창달' 및 '대외여건의 변화에 대한 적응'과 더불어 3대 기본목표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뒤 환경문제 전담기구로 환경청이 설립되었고, 제5차 5개년 계획에서도 환경문제를 중대한 국민경제문제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sup>29)</sup>.

생활의 질적 향상과 생활환경문제를 잘 해결해온 국가는 거의 없다고 하겠으나 우리는 이 문제를 중시하고 노력하는 국가가 되어야겠다<sup>30)</sup>.

## VI. 국민복지의 조건

국민순경제복지(NEW), 기본욕구(basic needs), 사회적 욕구(social needs) 그리고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등의 각종 접근법이 추구하는 바는 근본적으로 복지사회를 이룩하자는 것이며, 이를 방법이 제시하는 복지사회의 몇 가지 조건<sup>31)</sup>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생활에 있어서는 양적인 면에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야 함은 물론 국민 모두가 WHO에서 권장한 칼로리 섭취기준량 이상을 소비할 수 있어야 한고 질적인 면에서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과 오염되지 않는 식품을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의생활 면에서는 우리 나라와 소득이 비슷한 나라의 국민, 나아가서는 선진국민에 비해 빠지지 않을 정도의 옷차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가정생활에 긴요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고, 싱가폴의 경우에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가발전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다.

넷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게 되어야 한다. 즉 국민 모두가 '심신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나 병이 들면 고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유능한 의사와 훌륭한 의료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9) 조준 외, 「경제학 원론」, 전개서, pp.620-624.

30) 송병락, 「한국경제론」, 선개서, pp.775-777.

31) 이상옥, "전공기초교과목의 기초", 대신경영 제6호, 1990, pp.93-95.

다섯째, 누구나 충분한 교육을 받아 '능률'의 진의를 터득해야 됨은 물론 능률적인 국민이 되어 건전한 소비자나 유능한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개인은 계속 지식을 넓히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려는 창의적인 노력을 계속하여 앞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교양, 지식, 기술, 그리고 문화적 수준에서 어느 선진국 국민 못지 않게 우수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어린이는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적절히 구비된 시설이 있어야 하고, 어른의 경우에도 그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여건과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각종 범죄나 교통사고, 화재, 풍수해, 산업재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불의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속이거나 속임을 당하지 않아야 하고 억압이나 횡포에 의해 부당하게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최근의 아황화탄소 재해는 좋은 교훈을 준다.

여덟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살게 되므로 국민 모두가 활력 있게 열심히 일하게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 사회 생활에 있어서 성별, 출신, 지역, 학연, 등의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하며,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경제적·사회적으로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형평(equity)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정당한 경제적 기여나 공헌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이상에서 열거한 것들은 경제사회발전의 여러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상에는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문제"<sup>32)</sup>라고 하나 이들의 달성여부가 곧 국민생활 복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요건이다.

## VII. 결 론

복잡한 현대산업 사회에서 번잡한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지와 윤리문제를 반성해 볼 여유는 없다고 하지만 그들의 생활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경제윤리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윤리문제에 대하여 종교인, 철학인, 윤리학자들이 특히 관심을 기울이겠지만 그들의 주장이나 사상이 경제계의 실정을 잘 모름으로 해서 현실과 유리된 추상적인 것이 되기 쉽다. 반대로 경제사정을 잘 아는 경제인이나 경제학자들은 윤리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경제문제를 원리적, 윤리적으로 반성해 보면서 넓은 시야에서 생각

---

32) 송병락, 「한국경제론」, 전계서, 서문

해 볼 여유가 없다. 그러나 바른 경제생활, 바른 경제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현대산업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의 윤리적인 의미를 검토해 보아야겠다.

한국경제의 장래는 크게 문제로 하는 물량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바름을 문제로 하는 윤리적인 면에서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후 수차례 걸친 경제개발계획의 입안 실시를 통하여 고도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공업화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반면 불건전한 소비생활, 소득, 부, 권력분배의 불공평, 투기, 불공정거래, 환경오염 등 정신적 퇴폐현상과 같은 반윤리적 문제들도 많다. 특히 한국경제를 해치는 경제파동이 일어날 때마다 경제윤리의 함양, 양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었다. 때로는 정부, 기업, 권력층 나아가 근로자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 관주도, 정부주도의 비윤리적인 측면이 비판되고 기업가의 윤리의식의 앙양이 추구되었으며 근로자의 극단적인 저항이 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한국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윤리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더욱이 복지사회 건설의 물질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경제를 성숙단계로 이끌어 올리는데 있어서 안정성장과 산업고도화를 가져올 홀륭한 경제계획도 필요하지만 건전한 복지경제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경제윤리의 함양이 보다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장기적인 시야에서 한국 경제를 보다 빠르게, 보다 건전하게 꾸려나가고 아울러 이질체제하의 분단경제의 총합을 가져올 최적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경제문제에 대한 반성이고<sup>33)</sup>. 인간존재에 대한 위기를 인식, GNP증대의 우상승배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의 심신이 건강한 복지내용 증진을 위해 연구 노력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1. 경제구조조성 자문회의, 「경제선진화를 위한 기본 구상」, 1980.
2.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각년도.
3. \_\_\_\_\_, 「한국의 사회지표」, 1983.
4.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한국의 사회지표」, 1988.
5. 김낙중 외, 「한국 경제의 현단계」, 사계절 신서(22권), 사계절, 1985.
6. 단원 14, 단대, 1987.

33)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산업사회의 직업윤리」, 1981, 참조.

7.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사회의 질적 수준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센터, 1981.
8. 박영철, 「사회개발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 고려대학 아세아 문제 연구소, 1983.
9. 배대균, 「국민윤리학 원론(개정판)」, 고시계, 1990.
10. 손석현, 「인간과 윤리」, 성청사, 1985.
11. 송병락, 「마음의 경제학」, 박영사, 1990.
12. \_\_\_\_, 「한국 경제」, 박영사, 1990.
13. 시드니 세푸린·주명건 공저, 「경제윤리」, 박영사, 1987.
14. 신유근, 「기업과 사회 - 경영환경론 -」, 경문사, 1989.
15. 아더·엠·오큐 저, 이영선 옮김, 「평등과 효율」, 현상과 인식, 1988.
16.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복지사회의 이념과 방향", 창립 2주년 기념 심포지움 논문집, 1979.
17. 아산사회복지재단, "산업사회의 직업윤리", 아산사회복지재단, 1981.
18. 오호성, 「자원·환경경제학」, 법문사, 1989.
19. 옥드비리, 폰. 미이제스 저, 박병호 감역, 「인간행위의 경제학 하권」, 경문사, 1989.
20. 이만갑, "복지사회의 이념과 정책방향", 민정당 창당 1주년기념 복지사회구현 심포지움기조연설문, 1982.3.
21. 이상옥, "경제발전과 생산성향상 연구(성과배분을 중심으로)", 연구 논문집 3집, 대신대 1983.
22. \_\_\_\_, "노인복지와 여가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연구 5장, 대신대 복지행정연구소, 1989.
23. \_\_\_\_, "전공기초 교과목의 기초(경제학 I, II를 중심으로)", 대신경영 통권 제6호, 1990.
24. 일본의 새소식 제212호, 재 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 광보문화원, 1991. 4. 1.
25. 임원택 외, 「한국 경제의 이해」, 비봉, 1989.
26. 임희철, 「경제·사회의 발전과제」, 「산업연구 10집」, 단대 상업경제 연구원, 1987.
27. 전철환, 「한국경제론」, 창비신서(73권), 창작사, 1986.
28. 정운찬 외, 「도전받는 한국경제」, 한국신용평가(주), 1980.
29. 조순 외, 「경제학원론(제4전정판)」, 법문사, 1990.
30. 조선일보사설, 1991. 3. 22.
31. 주명건, 「경제학원론(제2전정판)」, 박영사, 1990.

32. 주학중, "성장을 통한 재분배와 기본생활요건의 충족", 한국개발연구, 1979년 겨울호.
33. 최상철, "생활환경수준의 향상-방향설정과 전략", 민정당 복지사회구현 심포지움 발표문, 1982. 3.
34. 최청립 칼럼, "경제 10주년 주기설", 조선일보, 1991. 4. 24.
35. 칼·풀라니 저, 박현수 옮김, 「인간의 경제 I, II」, 풀빛, 1983.
36. 한국개발연구원,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수정과제연구」, 1983.
37. 한국사회개발협회, 「사회개발-90년대를 향한 기본구상」, 1980.

#### 「외국문헌」

1. 金森久雄, 「入門日本經濟」(第5版), 1981.
2. 日本經濟企劃處, 「國民生活白書 : 生活基盤の 充實と 機會の 擴大」, 1979 및 「國民の 生活と 意識の 動向」, 1979.
3. 日本國民生活審議會 生活の 質委員會, 「社會指標」(新版), 1979.9.
4. Barry Commoner : *Ecology and Social Action*, Univ.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973.
5. Narindar Singh : *Economic and the Crisis of Ecology*, Oxford Univ. press calcutta, 1976.
6. Nordhaus, William D. and Tobin, James, "Is Growth Obsolete?", in *Fiftieth Anniversary Colloquium V*. NBER, New York : Columbia Univ. Press, 1972.
7.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3.